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피해자 동의 없는 배상 안 돼”

### 외교부 주관 ‘강제동원 해결 모색’ 민관협의체 불참 결정 日기업 ‘자산 강제 매각’ 앞두고 “형식적 의견 수렴” 비판

일제 치하 강제 노역 동원 피해자 배상 소송을 이끈 시민단체가 외교부가 난항을 겪고 있는 배상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최한 민관협의체에 불참했다.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강제 매각 명령) 관련 최종 판결을 앞두고, 정부가 외교 갈등 심화 우려에 급히 만든 논의기구의 구성·배상 해법 등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외교부가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풀기 위해 구성된 민관협의체에 불참했다고 10일 밝혔다.

민관협의체는 강제동원 배상 문제의 외교적 해법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만든 논의체로, 외교부와 피해자 지원단체와 법률 대리인, 학계 전문가와 언론·경제계 인사 등이 참여했다. 첫

회의는 지난 4일 열렸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과 11월 미쓰비시중공업,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강제 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후 배상 이행을 거부하는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강제 매각)를 위한 소송이 진행됐다.

특히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소송을 지원한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측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 2건, 특허권 2건에 대해 각각 매각 명령을 내려달라고 소를 제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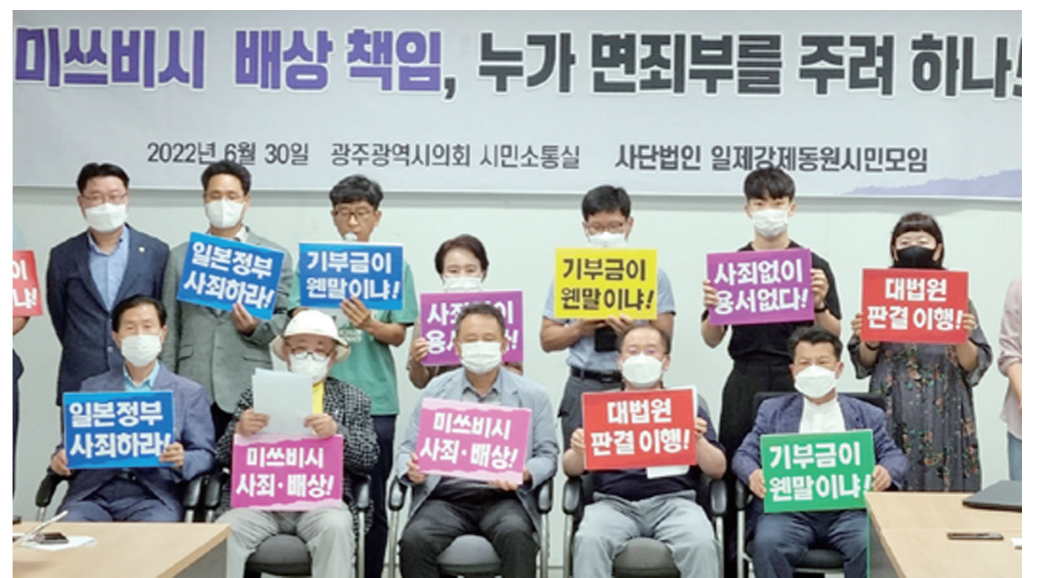
1·2심에서 법원은 모두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지난 4월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통상 재판 기간 등을 감안할 때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다음달 무렵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원 피해자 지원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강제 매각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물론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에 우리 정부는 외교적 해법 모색을 위해 민관협의회를 구성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관계자는 “외교부가 민관협의체의 성격과 운영 방안, 역할 등에 대해 책임 있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 정해진 어떤 일정과 가이드라인 안에서 답을 내려놓고 ‘피해자 의견 수렴’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치기 위한 자리라고 판단했다”며 협의회 불참 이유를 밝혔다.

또 “양국이 300억 규모 기금을 조성해 대위변제 방식의 배상을 한다, 가해 기업은 배상 주체에서 빠진다는 등의 의혹이 나오고 있지만, 외교부는 한 번이라도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다”며 “피해자 동의 없는 배상은 안 된다. 반드시 일본 기업의 사죄와 직접 배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민관협의회를 주관한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의 ‘빠르게 해결하겠다’, ‘한일 관계에 중요한 시기인 8월이 되면 의견을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등의 발언을 두고도 우려를 드러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있어 ‘중대 국면’이라고 판단, 오는 13일 긴급좌담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최이슬기자



**쓰레기장 된 강릉 경포해수욕장** 10일 오전 청소부들이 강릉 강릉시 경포해수욕장에서 밤새 쏟아져 나온 쓰레기를 수거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청소 관계자에 따르면 해수욕장 개장 후 첫 금·토요일 밤사이 쏟아진 쓰레기량은 8t이었다. 첫 주말 토·일요일 밤사이 쏟아진 쓰레기량은 약 16t으로 예상됐다.

## 광주 하남산단서 작업중 기계에 끼인 사고 30대 중상

9일 오전 9시 49분께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노동자 A(32)씨가 작업 중 기계에 상체 일부가 끼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씨가 의식을 잃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경찰은 A씨가 작업장에서 완성품을 꺼내려

던 중 작동한 기계에 다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형택기자

## 남부지방, ‘선제적 급수대책’ 추진

###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 345.6mm 기록

정부는 지난 6월 내린 비로 중부지방은 가뭄이 해소되었으나, 남부지방은 가뭄이 계속되고 있어 저수지 저수율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선제적으로 급수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기상청이 10일 공동 발표한 ‘7월 가뭄 예·경보’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전국의 누적 강수량은 345.6mm다. 평년의 76.0% 수준이다.

서울·경기, 강원 영서 지역의 기상가뭄은 해소되었으나, 전남·경북·경남 지역은 기상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강수량은 앞으로 9월까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한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 이남 지역의 기상가뭄은 점차 완화돼 8월에는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53.2%)은 평년의 92.7%로 대부분 정상 수준까지 회복했다. 다만 강수량이 적었던 전남·경북·경남지역은 저수율이 낮은 상황이다. 저수율이 낮은 지역은 저수지별 모의 예측을 통해 공급량을 제한해 급수하고, 강수 상황에 따라 하천수 직접 급수, 퇴수 제어용 등 선제적 급수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및 용수댐 저수율은 평년 대비 105.2%, 71.9% 수준으로 정상적인 용수공급을 유지하고 있다.

다목적댐·용수댐은 강우 부족 시에도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댐 용수공급 조정 기준에 따라 관상·주·경계·심각 단계별로 공급량을 조정해 용수 공급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 내린 비로 가뭄 단계로 관리하고 있던 12개 댐 중 운문·보령·밀양·소양강·충주·횡성댐 등 6개 댐의 저수 상황이 호전됐다.

다만, 일부 도서·산간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용수공급 제한 및 운반급수 등 비상 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1일 기준 13개 지역(인천 중구·옹진, 강원 정선, 충북 괴산·영동·제천·충주, 전남 보성·진도·완도, 경북 안동·청도, 경남 양산) 5388세대(1만1433명)가 대상이다.

김성중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최근 강수량이 부족한 남부지방에서 가뭄이 지속되고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용수공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중앙 및 지자체에서는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선제적으로 급수 대책을 실시하는 등 가뭄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정승호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